

## 대기업 올해 환경투자 20% 확대

주요 그룹들은 올해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환경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비를 지난해에 비해 20% 이상 크게 늘려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산공정 자체를 환경친화적으로 바꾸기 위한 공정개선사업과 ISO 14000제도 시행 등 환경분야의 국제적인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그룹은 환경부문 투자액을 지난해보다 1백% 이상 늘려 잡아 원격감시장치 설치 등 그룹차원의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대그룹은 지난 94년 그룹환경 선언서 올해까지 모두 3천5백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1천4백억원을 추가해 모두 4천9백억원으로 조정하면서 총 투자액을 2천억원으로 확정했다.

대우그룹은 올해 청정연료로의 전환을 위한 보일러 교체, 폐기물처리시설 도입 등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설비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선경, 포철, 두산 등의 경우에는 올해 전체 투자비는 줄었으나 청정생산체계개발, 에너지 및 자원절약방안 마련을 위한 투자액은 크게 늘었다.

선경그룹은 환경관리비용 및 환경분야 연구개발비를 지난해 보다 12% 늘어난 모두 3백60억원으로 책정했다. 포철은 작년말 현재 89% 수준인 폐기물 재활용률을 선진국 수준인 95%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새로운 용도 개발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한화그룹은 그룹 전체 기술개발비 가운데 4.3%에 달하는 87억원을 환경부문에 투자해 생물학적처리시스템 폐유재활용장치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효성그룹은 올해 산업폐수 10% 줄이기 운동을 벌이는 한편 고분자화학기술을 기초로 한 폐수정화기술을 개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 중공업 업체 환경설비사업 본격화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환경설비시장 규모가 점차 확대되자 중공업 업체들이 환경설비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4월 1일 관련업체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한라중

공업, 기아중공업 등 중공업체들은 올해 환경설비사업 부문 매출목표를 지난해보다 대폭 늘려잡고 외국 업체와의 합작회사 설립 및 기술제휴를 추진하는 등 환경설비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6천7백만달러에 불과했던 환경설비사업부문 매출액을 올해는 이보다 3배가 넘는 2억5천만달러로 늘려 잡고 최근들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전기집진기, 생활쓰레기 및 사업장 소각설비 등의 수주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라중공업은 환경설비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독일의 환경설비 설계 및 제작전문업체인 도이치바브 콕사와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국내 환경설비시장은 물론 해외시장에도 공동 진출키로 했다.

소형 쓰레기소각로를 생산해왔던 대한중석도 최근 일본의 히타치금속과 중형소각로 제조에 관한 기술제휴를 하고 환경플랜트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대한중석은 이번 기술제휴를 통해 시간당 5백-3천kg을 소각할 수 있는 중형 도시형 쓰레기소각로를 건설할 수 있게 됐고 앞으로 사업범위를 사업장용 쓰레기소각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기아중공업도 사업구조를 종전의 공작기계 중심에서 건설기계, 플랜트 등 중공업 중심으로 바꾸기로 하고 이를 위해 소각로 설비 등 환경플랜트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또 대우중공업과 삼성중공업도 쓰레기소각장 건설을 추진중인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쓰레기소각장 건설시장 선점을 위한 본격적인 수주작업에 돌입했다.

## 환경 우선정책이 가장 중요

국민 3명중 1명 이상이 정부정책의 최우선을 교통문제 해소, 무역증진, 사회보장확대 등에 앞서 환경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환경부의 환경정책 연구기관인 한국환경기술개발원이 전국에서 표본추출한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남녀 1천5백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부문별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물은 결과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이 35%로 가장 많았고 2위는 교통문제(20%)가 차지했다.

이어 경제전쟁 시대를 맞아 무역이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이 17%를 차지했고 ▲ 사회보장 13% ▲ 건설개발과 노동문제가 각각 7% 순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환경정책의 중요성은 21세기에 들어서면 더욱 부각될 것으로 국민들이 전망하고 있다.

21세기의 정책중요도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41%가 환경정책을 꼽았으며 2위는 사회보장(21%)으로 나타났다.

이어 무역과 교통이 각각 13%로 나타났고 경제건설 개발과 노동문제가 6% 씩으로 집계됐다.

## 정신적 피해도 배상

지난해말 인천시 남구 고잔동 지역의 유리섬유 피해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인체피해와는 무관하다고 결론이 내려졌지만 정신적 피해는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김영길)는 지난 4월 2일 인천시 남구 고잔동 65번지 일대에 거주하는 김선배씨(56·여)와 2백8명이 한국인슈로산업(주)(대표·유병호)을 상대로 낸 유리섬유로 인한 피해 배상신청에서 인슈로측은 주민 25명에게 모두 2천1백4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김씨 등은 신청서에서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국인슈로산업에서 발생한 유리섬유로 위장장애, 괴종양, 호흡기질환, 피부질환 등의 인체 및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피해배상금으로 29억6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분쟁조정위는 인슈로측이 유리섬유 폐기물을 장기간 야적하며 관리부실 등으로 유리섬유가 야적장에서부터 최대 1백47m까지 날아가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쳤으며 야적장으로부터 1백47m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25명의 신청인들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2천1백4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는 인체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말 서울대 역학조사 결과 고잔동 지역 지하수와 인체종양조직에서 유리섬유가 검출되지 않았고 주민들과 인슈로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에서도 특이한 질병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론에 따라 유리섬유와 인체피해는 무관하다며 기각했다.

인천 고잔동 유리섬유 사건은 유리섬유로 단열재를 생산하는 한국인슈로가 지난 74년 조업을 시작한 후 주민 일부에게서 위장장애와 괴종양 등이 발생, 그 원인이

유리섬유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라는 주장에 따라 작년 5월부터 6개월여간 서울대가 중심이 돼 역학조사와 주민건강검진을 실시, 인체피해와 무관하다는 결론이 났었다.

## 환경영향평가 유효기간 설정

자연훼손이 우려되는 대형 개발사업을 착수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자가 일정기간내에 사업을 실시하지 않으면 환경영향평가가 무효가 된다.

환경부는 지난 4월 3일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환경보전 및 오염방지에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등 실효성이 없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마련, 올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법개정을 통해 우선 대형개발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나 관할 지방환경청에서 받아낸 뒤 3-5년안에 사업시행을 하지 않으면 기존의 영향평가를 무효화하고 다시 평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영향평가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려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시행을 미룰 경우 주변 환경여건이 크게 바뀌게 돼 종전의 영향평가가 무의미해진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영향평가의 유효기간을 사업의 종류별로 3-5년 이내로 설정하되 구체적인 기간은 전문가,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를 대만히 해 환경이 훼손될 경우 종전에는 시·도 등 사업승인기관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주도록 요청하는데 그쳤으나 이를 보다 강화해 환경영향평가를 해준 환경부나 지방환경청이 직접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밖에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하는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전문성이 낮아 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된다는 지적에 따라 평가대행기관에 대한 보수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교육제도로는 평가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3년에 한 차례씩 환경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개정안에 일선 시·도가 현행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아닌 소규모 사업이라도 지역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 남해안 4개 연안 특별관리 해역 지정

환경부는 지난 4월 8일 오염이 심한 해역과 주요어장 등 11개 연안을 내년부터 99년까지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해 바다를 오염으로부터 지키기로 했다.

환경부의 특별관리해역 지정계획에 따르면 육상오염원이 많아 오염도가 증가추세에 있는 경남의 고성만과 자란만, 전남의 강진만과 가막만 등 남해안의 4개 연안 지역은 내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어 내년에는 인천연안, 전남의 여사만, 도암만, 득량만 및 경남의 한산만 등 5개 해역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추가하고 98년도에는 군산 해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또 99년에는 목포 해역을 마지막으로 지정해 오염우려가 높은 연안바다를 모두 특별관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는 특별관리해역이 공단이 밀집한 울산연안, 여수연안, 진해만, 광양만 등 네곳에 불과하나 향후 단계적으로 추가 지정해나간다면 4년 뒤에는 지정규모가 모두 15곳으로 확대된다.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되면 해양오염방지법규의 규정에 따라 연안 오염부하량이 과학적으로 산정돼 이를 감축하기 위한 대책이 시행된다.

또한 관리해역의 오염도에 영향을 미치는 배후 육지에 설치된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이 강화되며 배후지역에 오·폐수 종말처리장의 집중설치 등 환경오염방지시설이 대폭 확충된다.

이와 함께 관리해역 및 배후육지의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엄격히 실시돼 해수수질의 악화를 막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다각적인 대책이 추진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종래에는 공단을 끼고 있는 연안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삼았으나 앞으로는 도시를 끼고 있거나 수산자원이 풍부한 어장을 추가해 적조발생 및 각종 오염사고로부터 해양자원과 어민을 보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소각시설 외국기술 의존도 95%

대형 쓰레기 소각시설의 95%가 외국에서 로열티를

지불하고 들여온 기술로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가동중이거나 건설 추진중인 소각로는 모두 20개소로 이중 19개가 외국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이들 소각로는 모두 국내 대기업들이 건설하고 있으나 예외없이 일본, 독일, 스위스 등 환경산업이 발달한 나라에서 소각기술 등 관련 기술을 도입해 시공하고 있다.

국내 기술로 시공한 소각시설은 지난 92년말 완공된 대전소각장 뿐으로 럭키개발이 주주, 한국에너지자원연구소의 기술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국내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여타 소각시설은 모두 외국의 기술에 의존해 건설됐으며 특히 건설이 확정된 서울의 일원동 소각장 등 10개의 소각로도 모두 외국의 기술을 들여와 건설될 예정이다.

현재 가동중인 의정부소각장(하루 처리능력 50t)은 롯데기공이 일본 구보타의 기술을 제공받아 설치했으며, 서울 목동(1백50t)과 대구(2백t)는 (주)대우가 일본 히타치조선의 기술을 지원받았다.

또 수도권외 성남(1백t)은 쌍용건설이 일본 미쓰조선, 평촌(2백t)은 동부건설이 독일 슈타인밀러, 중동(2백t)은 대우가 일본 히타치조선에서 기술을 도입했다.

삼성중공업이 작년에 완공한 일산소각장(3백t)도 일본 미쓰비시의 기술로 지었으며 가동중인 부산(2백t)과 창원(2백t)은 한라중공업이 덴마크의 볼룬드사와 기술 제휴했다.

올해 완공될 예정인 서울의 노원(8백t, 현대중공업)과 목동(4백t, 선정건설) 소각장은 각각 독일과 벨기에 기술로 설치되고 있다.

또 올해 착공되는 서울 일원동 소각장(1천8백t)과 광주소각장은 선정건설이 수주해 스위스와 벨기에의 기술로 건설될 예정이다.

이처럼 쓰레기 소각시설의 기술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국내의 기술개발이 국제적인 수준에 오르지 못해 막대한 설치비가 떠치는 소각시설의 발주처인 지방자치단체들이 국산기술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 대기오염 종합센서스 처음 실시

대기오염 종합센서스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다.

환경부는 지난 4월 12일 공기를 오염시키는 물질을 배출하는 각종 시설을 대상으로 작년 한해 동안 배출한 오염물질 총량을 조사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의 종류 및 배출 규모를 파악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5일부터 6월말까지 본부, 일선 시·군·구 및 8개 지방환경관리청 합동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조사대상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1종 부터 5종 까지로 분류된 전국의 3만74개 산업체며 주된 조사항목은 황산화물, 먼지,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 5대 오염물질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가 작년에 운행한 거리와 배기량 등을 감안한 자동차 오염물질을 정확히 산정하고 항공기가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규모도 조사하기로 했다.

또한 철도청의 협조를 받아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기관차의 연간 오염물질 발생 총량도 조사해 항공기와 함께 기차에 의한 대기오염 감축방안을 마련하는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소형 소각시설의 가동에 따른 대기오염 현황도 파악하고 작년에 발생한 산불 및 건물 화재의 규모를 파악해 이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수치도 산정하기로 했다.

또 가정용 난방, 취사 등의 연료사용량을 토대로 가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규모를 파악하고 건설공사 및 도로의 자동차 통행 등에 의한 먼지발생량도 조사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오는 6월말까지 각 시·군·구가 조사한 오염물질 센서스를 취합, 대기오염 백서를 작성해 발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대기오염 센서스를 앞으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전개해 대기질을 개선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 청정기술개발 지원체계 구축

통상산업부는 중소기업의 청정기술개발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생산기술연구원, 기계연구소 등 7개 기관을 '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로 지정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했다고 지난 4월 14일 밝혔다.

통산부는 특히 산업환경개선사업이 민간 주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를 '산업환경개선실천운동본부'로 지정, 영세 지방공업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청정생산기술 정보를 중소기업에 전달하는 전문기관으로 산업기술정보원을 지정하는 한편 올해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의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청정기술분야의 국제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산부는 또 금년중 생산기술연구원 안에 3~4개월의 청정기술 관련과정을 설치하고 이어 98년 문을 여는 산업기술대학에도 청정기술학과를 설치, 전문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 업체 선진국 환경규제로 타격

우리 기업들이 선진국의 환경규제 강화 움직임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4월 16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주)SKC, 대우전자를 비롯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1백53개사를 대상으로 환경규제와 수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이들 업체의 71.8%가 국제환경규제 강화로 제품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영향정도에 대해서는 약간 영향을 받았다는 기업이 전체 응답업체의 48.1%에 달했으며 영향이 많다는 업체는 23.7%였다.

업종별로는 섬유, 가죽, 신발제조업체가 원단 가공때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배출규제와 원료조달 및 제조때의 유해물질 사용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화학제품, 기계 및 장비, 고무 및 플라스틱제조업체는 포장 폐기물 회수의무, 염화불화탄소(CFCs) 대체물질 사용에 따른 원가상승 등으로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다.

또 영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체는 에너지 효율규제, 폐건전지 회수의무, 특정 포장재 사용규제 및 회수의무로 애로를 느끼고 있으며 가구제조업체는 유해도로 사용규제, 도금공정때의 유해물질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응답업체의 2.6%만이 해외 환경마크를 획득했으며 환경마크 인증을 신청중인 업체는 1.3%, 조만간 인증을 신청할 예정인 업체는 18.3%에 불과해 우리업체들이 해외 환경마크 획득에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